

사공많은 민주당 시민배심원제

지도부 추진속 입장 제각각 갈등 조짐

의원들 반대...출마자들도 찬반 엇갈려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광주 국회의원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논의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대표 입장=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관련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한 마디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 대표는 28일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장 등 광역단체장 경선에서의 시민배심원제 도입은 시·도당과의 소통과 협의, 중앙당 공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힌 뒤 "일반적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여분과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중,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오찬 자리에서도 "중앙당 공심위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설 이후에나 광주시장 경선 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흥행

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당심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광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배심원제 도입 여부=일단 민주당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중앙당 공심위에서는 광주 민심의 흐름과 광주지역 의원들의 의견,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선 방법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강해 출마 예정자들도 찬반도 엇갈리고 있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이용섭 의원을 제외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의원은 강기정 의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주선·조영택·김재균 의원 등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김동철·김영진 의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뒷발'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시장 후보 공천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태가 악화할 경우, 수도권 등 전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정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공천은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후보압축(컷-오프)→국민경선 순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광주·전남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에는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8일 광주 영주체육공원 내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 출마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박주선·정세균·강운태의원. 강의원 부인 이덕희씨, 최인기·이용섭 의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원직 유지·사퇴 논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문제가 지역 정가의 쟁점이 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광주시장과 전남 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상대 후보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중앙당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를 말리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사퇴압박을 피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민단체 '광주 희망과 대안'(공동집행위원장 김강렬·나기백·박미경)은 28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의

“시·도지사 나오려면 국회의원 사퇴를” “세종시 수정 막으려면 현직 유지해야”

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국회의원에게 뼈아픈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에 선출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안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구현이 아닌 기회주의적 행태일 뿐"이라며 "당장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백의종군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갑길 광산구청장과 양형일 전 국회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고 이들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광주 뿐 아니라 전남과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다수의 의원이 사퇴하면 4월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세종시 개정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당력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의원 사퇴를 말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강운태·이용섭 의원이, 전남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각각 시·도지사 자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희망과 대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만들기 등 적극적인 시민정치운동을 위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만든 단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육의원 직선이나 정당공천이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교육자치법 개정 공방

교육경력 2~5년으로 완화 방안 공감대

교육의원 선거 방식 등을 다루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친 끝에 한 차례 정회 되는 등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직선제로 하면 대다수의 경우 인구 225만명 당 1명의 교육위원을 뽑게 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게 되면 100여명의 국비가 낭비된다"며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져와 여야가 합의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법안소위에 다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느닷없이 당론으로 비튼 것은 삼임위 중심의 의회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세연 의원은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당론으로 반복하는 것은 국회를 당의 아래에 두겠다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교육정책으로 마련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소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하다"며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입장은 타협

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은 교육의원 정당추천제로 여야가 교육위원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고, 정당추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 교육위원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동당 권영길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커녕 후원회 가입도 사법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이 어떤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고 가세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을 되살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경력기간을 2~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과위는 지난해 12월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임후보자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애초 2월1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글로벌 금융안전망 만들자”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이명박(MB)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롱그레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주회 '제40차 다보스포럼'에 참석,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3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서울 G20의 3대 운영방향은 ▲기존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국제 개발협력 해소,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회원국 아웃리치(outreach: 외연확대) 및 비즈니스 서밋(summit) 개최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

성으로 인해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간 협력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체제가 이미 두차례의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촉발됐지만 개도국과 신흥국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위기예방 및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안전망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구축되면 신흥국과 개도국은 외환보유액 확충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경상수지 흑자에만 매달릴 이유도 줄어들게 돼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services, including tours,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Text includes '제주여행' and '제주관광부'.

Advertisement for 'Helsking' ice skating equipment. Features a man holding a produc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ext includes '대인민국 대표 건강신발' and '헬스킹 기능화'.